



정세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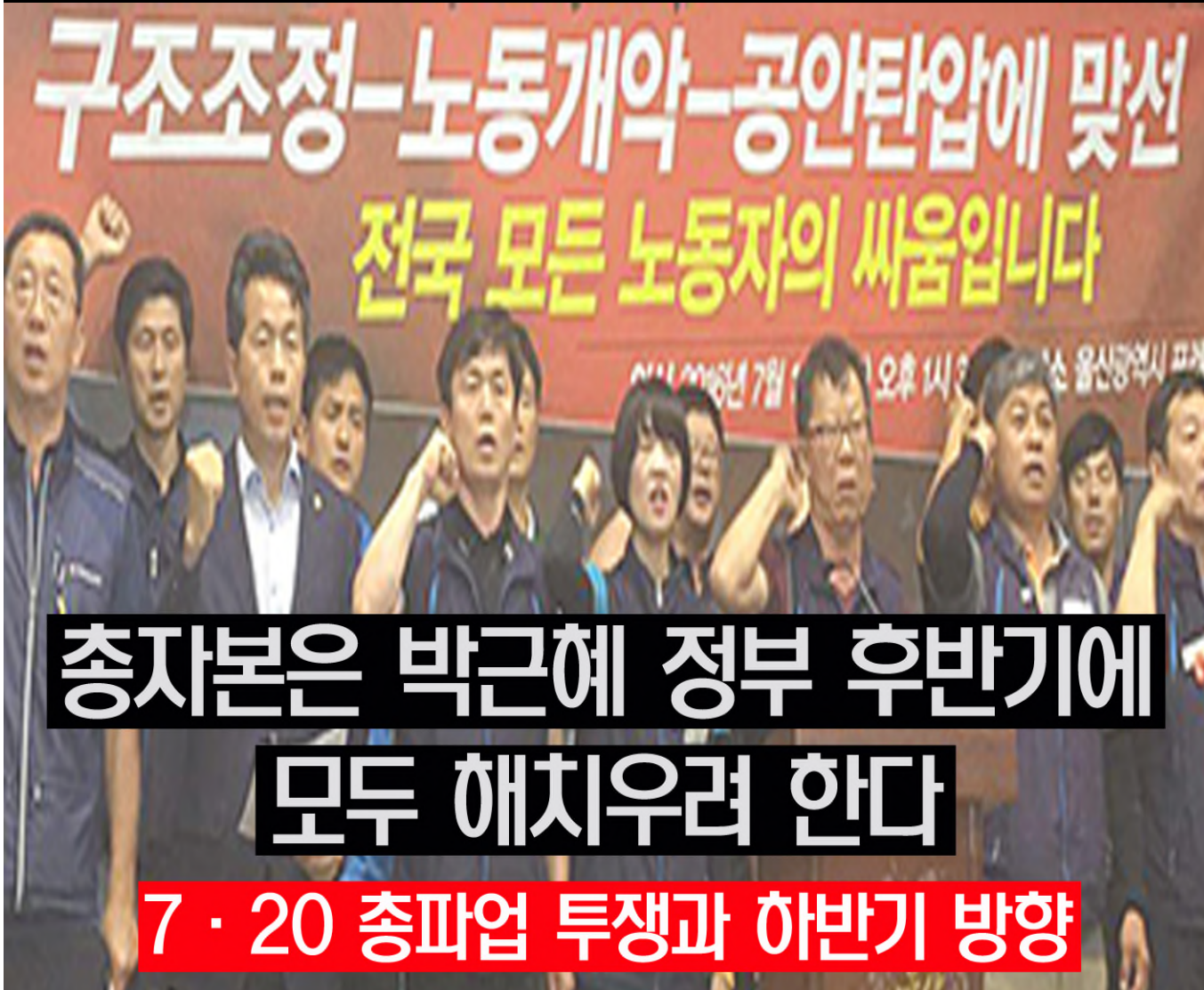
제93호

2016년 7월 19일 발행

홈페이지: <http://napo.jinbo.net>

이메일: napo@jinbo.net

발행처: 노동전선



7·20 총파업 노동자의 투쟁이 하나로 더 큰 투쟁으로

이날, 울산에서는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그리고 플랜트 노동자들이 중심에 서서 힘찬 투쟁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위 사업장들은 구조조정과 단협개악, 노조탄압 등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직면해 있다. 전국적으로 금속과 건설을 비롯하여, 성과 퇴출제 노동개악 공세와 공공민영화에 직면한 공공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파업 대오가 얼마나 될지는 당일이 되어야 확인되겠지만, 작년 7월 파업과의 분명한 차이점은 현장에서 올라오는 투쟁의 기세이다. 각양각색의 노동자들이 대정부 투쟁으로 하나로 모인다는 점이다. 큰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농후하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7·20 파업을 형식적 투쟁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금물이다. 전국 노동자들의 고통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 이러한 불만들이 투쟁으로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소 해고와 임금삭감, 건설노조 압수수색, 공공 퇴출제와 민영화, 전교조·공무원 탄압, 유성 노조파괴 공작 등! 2017년 최저임금을 탈락 400여 원 올렸다. 불법파견이 마구 자행되며, 구의역 참사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보호와 권리는 없다. 7·20 파업은 이러한 노동자들이 대거 운집하여 정부를 규탄할 것이다. 이렇듯, 올해의 임단협 시기집중 정치파업의 성격은 다양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노동개악'을 자행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 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자연스럽게 하반기 더 큰 투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 총자본은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에 모두를 집어삼키려 하기 때문이다

‘10월 사드배치’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 본토 방위를 위한 동북아 MD전략의 일환이라는 진실을 북핵 위협으로 둔갑시켜서 전 민중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 부문에 이어서 철도 민영화를 급발표하였다. 공공, 의료, 교육 등을 줄줄이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이는 곧 재벌의 사유화이다. 10조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조선 구조조정의 끝이 중소 조선소를 몰락시키며, 빅3에서 빅2로의 재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공공과 조선의 구조조정이란, 노동자들에 대한 살육 과정임은 물론이다.

하반기에도 정부 정책은 변함없을 것이다. 4·13 총선 후 곧바로 돌입했던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공공성과 임금제 방침만큼이나 속전속결로!

집권 여당이 소수로 내몰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떨어졌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전 민중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는 모양새다. 레임덕에 걸리고 식물화되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펄펄 날고 있지 않은가? 임기 말 박근혜 정부의 효용성 때문이다. 누가 봐도 보수 정권의 재창출은 어렵다. 그렇기에, 독점자본을 위시해서 총자본 입장에서 1년 남짓한 박근혜 정권을 통해, 그 동안의 숙원사업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지금이 아니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참에 알짜배기 철도, 한전, 가스 등을 민간 재벌이 먹어 치우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총자본을 대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조선, 해운 등 구조조정과 일부 재벌에 대한 사정의 칼도 이러한 원리가 작동된다. 파견법

으로 대표되는 노동법 개혁과 쉬운 해고의 길을 여는 성과 임금제, 노동조합 무력화! 즉,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악)이 야말로 총자본의 숙원사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하반기, 거대한 노동자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완전히 몰락시키자!

경제위기를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 본질에서는 총자본 지배계급의 이해가 작동되면서 현재와 같은 ‘노동자 죽이기’ 공세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총자본의 화신인 미 제국주의에 속박당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사드 배치 선언으로 전 민중을 전쟁 위협에 노출시키고 있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정세를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지 않으면, 노동자 민중은 더욱 살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5년 선고를 받은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20만 민중 총궐기로 맞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위력적인 투쟁 없이 일회적인 투쟁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는 점도 각인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첫째, 하반기 투쟁의 방향은 정확히 박근혜 정부를 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가 총자본과 미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힘과 틀에 의해서 작동하지만, 그 실행 권력은 박근혜 정부로 대표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 행정 권력이 작동불능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둘째, 하반기 대정부 투쟁의 쟁점은 노동개혁(탄압), 구조조정, 사드배치이다.** 시기의 흐름과 주체진영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노동자 민중의 핵심 사안이다. 따라서, 각각의 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될 때, 요구의 관철과 함께 진정한 변혁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셋째, 노동자 투쟁의 역할이다.** ‘20만 민중 총궐기’가 상징

하는 것은 그만큼의 단결과 쫓기의 성격이다. 그러나, 하반기 놓여 있는 실제적인 과제를 달성하려면 연인원 200만의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박근혜 정부를 실질적으로 몰락시키지 않고는, 모든 정책은 이미 시동이 걸려서 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투쟁의 성격과 상은 이렇듯, ‘세상을 뒤엎는 노동자 총파업’을 원하고 있다. **노동전선**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배치를 둘러싸고 설왕설래하던 사드가, 불과 며칠 사이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면서 경북 성주로 배치 장소까지 결정되는 등, 사드 배치는 이제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배치 장소로 발표된 성주 군민들은, 설명회에 참석한 총리에게 계란·물병 세례를 퍼부었고, 총리가 탄 차량을 6시간이나 가로막았으며, 등교 거부와 촛불 집회, 상경 일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드한국배치반대 전국대책회의(준)’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진영에서도 서울 도심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와 반대는 아직 정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반대 목소리 또한 성주를 제외하면, 실제 거리에서보다는 주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마디로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한·일의 군사적 통합을 의미한다. 2007년 하반기 경제 공황 이래,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를 매개로 재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하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평화 헌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일 간 군사적 통합이 필수적이다. 즉, 한·미·일 군사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패권은 유지·강화될 수 있는데, 미·일 간, 미·한 간의 군사적 통합은 미일안보장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이미 실행되고 있고, 사실상 핵심적 과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적 통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이해 속에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국 사드 배치를 일련의 작업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사드 배치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한국을 편입시키고, 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군사적 지휘 통제를 통합시키는 것이 이번 사드 배치의 핵심적 내용이다.



미국의 이해와 한국의 이해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동유럽에서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이르는 대중국, 대러시아 포위환의 일부분이다. 이는 두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첫째 실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경쟁에서의 우위를 위해 정치적·군사적 위력을 동원할 필요성이다. 즉, 미국 중심의 단일 패권 유지를 위해, 실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성이다. 특히, 2007년 대공황 이후 전개되고 있는 각국의 경제 위기와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단일 패권을 일정하게 교란시키고 있다.

둘째, 이와 같은 경제 위기에 따른 미국 내의 갈등을,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대결 구도로 돌려보려는 속셈이다. 점차 고조되고 있는 흑백 갈등, 대선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여러 사회적 요구들은, 미국 내 계급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같은 갈등 양상은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더욱 거세게 나타날 것인데, 이러한 내부의 갈등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결이라는 외부적 갈등 구도로 돌려보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제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둘은 경쟁적인 측면과 더불어 미국 국채를 매개로 한 때려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인데,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강화하면서 내부적 단결을 꾀하고, 동시에 내부적 탄압을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다(중국과 러시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물론 첫째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적 갈등 관계도 놓쳐서는 안 되지만, 이와 같은 상황도 고려해 한다는 의미에서 언급한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속셈은, 한국과 일본에서 더욱 크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에서의 북의 위협, 일본에서의 중국과 조선의 위협이라는 형태로 말이다. 그리고 이들 나라에서는 이

와 같은 위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내부를 단속하고, 동시에 내부의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세계 전략, 특히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의 배치임과 더불어 한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인데, 한국의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가 심화될수록, 그에 따른 내부의 계급 갈등의 증폭, 계급투쟁의 격렬화 등으로 더욱더 미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번 사드 도입이 말하고 있듯 더욱 자발적으로 한미일 동맹 강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사드 배치, 어떻게 철회시킬 것인가

이처럼, 한국의 사드 배치는 한국 지배자들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저들과 한국 절대다수의 민중들과는 아무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저들은 국민은 어떻게 되든, 자신의 소유와 권력만 지키면 되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어떻게 철회시킬 것인가? 한국 국가의 본질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수위의 투쟁으로 그것의 철회가 가능하겠는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한 더민주당의 태도가 이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저들은 혹시나 있을 차기 집권시에

한미관계를 고려해 지금 당장 반대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그렇다! 사드 배치는 한·미 동맹의 문제이고, 이는 건국 이래 한국의 본질적 문제이다. 수십만이 모여 싸웠던, 한미 FTA 반대 투쟁,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도 승리하지 못했다. 하물며 사드 배치는 이보다 더 큰 한·미 동맹의 직접적 문제이다!

정리하자. 새누리당 정권이 다른 정권으로 교체된다고 한들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정도의 시늉만 취할 가능성 높다. 실제 사드 배치를 저지할 수 있는 정권은, 사실 한·미 관계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정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혹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국제적 차원에서 미·중 간 협상으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상을 종합하면,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

이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투쟁만이 사드 배치를 철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드 배치 반대 투쟁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선두로 하는 박근혜 정권을 겨냥하는 모든 투쟁들이, 전방위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에워싸고, 이 정권의 심장에 집중포화를 퍼부어야 한다.

저들이 항복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쓰러지느냐, 전면적 전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노동전선**

전선 칼럼 (2)

구조조정과 민주노조 파괴의 양수검장,

전력·에너지산업 민영화

1. 박근혜 정부의 전력·에너지산업 민영화 재추진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문제는 20여 년의 논란과 추진 중단, 재점화에 이르는 긴 세월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온 문제이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며 대통령의 선언으로 중단되었던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박근혜 정부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4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공식화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증시 상장, 전력판매 및 가스도입 시장 민간개방, 해외자원개발 공공기관 인력·조직 축소를 담은 방안이다. 발전5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은 증시 상장도 추진한다. 전체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라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민영화(사유화)라는 실명을

은폐하기 위해 혼합소유제라는 가명을 써서 국민들에게 ‘동일성의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력 판매 부분의 민간 개방, 가스 도입·도매시장 민간 개방, 주식 지분 20~30% 상장 등은 ‘단계적, 우회적 민영화 정책’이다. ‘기능조정’의 외피를 쓴 민영화 방안이다.

에너지산업 민영화 계획에 뒤이어 7월 6일 국토교통부가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추진은 국가기간산업 전체로 확대된 상황이다.

2.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준비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박근혜 정권의 ‘묻지마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항의면담, 집회, 성명서 발표, 긴급좌담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준비하면서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조간부들과 현장조합원들에게는 다시 추진되는 민영화 정책 동향보고와 투쟁 결의 등을 모아내고 있다. 기존의 연대 단위들과 신속한 소통을 통해서 전력·에너지산업 민영화 반대 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철도민영화 계획이 추가되면서 연대투쟁을 모색하고 있다. **5면으로 이어짐**

박근혜 정권, 철도사유화의 본색을 드러내다!

— 이명박은 4대강 삼질, 박근혜는 철도산업을 독점자본의 먹이로!

건설에서 운영까지 한꺼번에 재벌에게 넘긴다!

지난 7월 6일 국토부는,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원 민간자본 유치〉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상정·보고한 내용이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기가 막힌다.

민간자본이 철도를 건설하여 기존 사업자(철도공사)에게 선로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간자본이 철도의 건설주체일 뿐만 아니라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현재 철도는 시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주요 신규사업〉에 따르면, 가장 알짜배기 구간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철도망을 망라하여 민간자본에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정부의 제안에 더해서, 추가로 “민간의 제안을 검토하여 승인한다”는 방침

4면에서 이어짐 2002년 철도, 발전, 가스 3노조 동맹 파업을 통해 민영화를 중단시킨 연대투쟁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상호 유기적 협조와 투쟁 체제를 정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민영화 공세와 민주노조의 함수관계

지난 20여 년 동안 논란과 격전을 치렀던 민영화 문제는 IMF시기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관철 수단으로서 철도, 전력, 가스산업구조개편 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놓고 투항한 세력과 저항한 민주노조 진영의 확연한 분리정립의 과정을 거쳐 왔다.

어용노조 집행부의 투항 과정에 격렬한 저항을 하며 노조민주화 투쟁을 병행했고, 2001년 노조 설립 후 즉각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발전노조와 파업의 과정을 거친 후 가스노조와 철도노조가 각각 민주노총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연혁적 과정으로 인해 당국은 민영화 중단 이후에도 틈만 나면 민영화의 재추진과 완성을 위해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2002년 파업 후와 2010, 2011년의 발전노조 파괴 공작과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 가스노조에 대한 탄압 등을 기획 및 실행했다. 정권과 자본의 민영화 공세에 대한 반격의 힘은 민주노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피아가 명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지난한 투쟁의 시간을 지난 15년 동안 진행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4. 구조조정과 공공성 강화의 공통분모, 민영화 쟁점

2002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3산업 3노조의 동맹파업이라는 전면전 이후 우회적, 부분적 민영화 추진의 국지전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전력·에너지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

관계 승부의 축은 구조개편계획추진론과 공공성 강화론 양자 간의 힘관계였다. 지난 20년 논란의 총결산 과정이 될 이번 2차 투쟁의 과정과 결과도 양자의 역관계에 따라 좌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양진영 모두에게 민영화 쟁점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관련 승부의 요체이며 충돌의 공통분모가 된다.

이 승부의 결정 요인 중 산업 내적 요인 외에 외적 요인은 결국 공공부문의 특성상 여론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연대의 중요성은 여타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적 서비스의 향유 주체들의 직간접적인 의사표명은 승부의 기능쇠가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전면적 구조조정을 위한 민영화 저지와 민주노조 사수는 수레의 양바퀴요,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자본의 입장에서 민영화와 구조조정 완성과 민주노조 파괴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것이고 양수겸장이듯이....

5. 전면전의 서막, 단호한 투쟁과 연대로 승리를...

현시점에서 정권과 자본의 의지대로 긴 싸움의 결말이 날지 노동자 민중들의 승리로 귀결될지는 예측불허이다. 단판 승부가 될지 지구전이 될지도 예단하기 쉽지 않다. 다만 단계적 증시상장 방식의 경로를 밝히며 민영화가 아니라 굳이 강변하는 외관을 보면 짧지 않은 기간의 싸움일 수도 있겠다. 여하튼, 전력·에너지산업 민영화를 둘러싼 2차 대전의 서막이 올랐기에 투쟁의 전열을 정비하며 민주노조운동의 명운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전력·에너지산업 더 넓게는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호동(공동대표)

도 덧붙이고 있다. 자본이 철도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철도역세권 개발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한다.

민간자본이 철도에 대한 건설·운영·부대사업까지 마음대로 해 먹도록 하는 정책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노 선 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경부고속선	수색 ~ 서울 ~ 금천구청	복선전철	30.0
	평택 ~ 오송	2복선전철화	47.5
중앙선	용산 ~ 청량리 ~ 망우	2복선전철	17.3
수서광주선	수서 ~ 광주	복선전철	19.2
문경·경북선	문경 ~ 점촌 ~ 김천	단선전철	73.0
남부내륙선	김천 ~ 거제	단선전철	181.6
춘천속초선	춘천 ~ 속초	단선전철	94.0
평택부발선	평택 ~ 부발	단선전철	53.8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송도 ~ 청량리	복선전철	48.7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의정부 ~ 금정	복선전철	45.8
신분당선	호매실 ~ 봉담	복선전철	7.1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동빙고 ~ 삼송	복선전철	21.7
원종홍대선	원종 ~ 홍대입구	복선전철	16.3
위례과천선	복정 ~ 경마공원	복선전철	15.2

정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를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 ‘국가 기간망인 철도는 가스·공항·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추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2013년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사유화 정책에 맞서 파업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뿐 아니라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은 “절대 철도민영화가 아니며 민영화를 하지도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수차례 걸쳐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아예 토목 건설자본들에게 철도건설에서 운영까지, 소유와 운영을 통째로 넘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철도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9.8조원 민간자본 유치’는 철도에 대한 전면적인 사유화 계획이자 노골적인 재벌특혜 정책이다.

박근혜 정권은 정책과 모든 행보는 철저히 계급적이다

늪고 늪아버린 자본주의는 자기모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형국이다. 오직 이윤을 위한 생산, 그것도 무한 경쟁 속에 쏟아내는 상품들은 과잉생산에 따른 경제위기라는 재

앙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1998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본가 정권의 정책은 ‘전체 국민의 정부’라는 포장에 찢어 버린 지 오래다. 우리 모두가 목도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행태들, 정책들이 얼마나 철저히 자본가, 그것도 독점자본가 계급을 중심으로 작동되고 있는

지를.... 그 하나는 독점자본에 대한 천문학적인 구제 금융을 쏟아붓는 것이다. ‘조선산업에 12조를 지원하고, 8만 명의 노동자를 질라’내는 정책이 그 일단이다.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떤가? 재벌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사유화정책을 합의절차 따위는 깡그리 무시하고 추진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는 어떤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을 모두 ‘비용’으로만 본다. 그래서 독점자본에 대한 공황구제로 늘어난 정부 부채를 공기업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폭압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연금삭감, 복지후퇴, 연봉제

와 퇴출제 도입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그들은 필연적인 저항을 의식하고 노조파괴 공작에 열을 올린다.

한마디로 국가권력은 독점재벌에 대한 사활을 건 지원을, 한편으로, 노동자 민중에 대한 무한 착취를 국가가 앞장서서 전면화한다. 헌법에 명시된, 그것도 역사적인 투쟁을 통해 확보한 기본권, 민주주의는 오직 폭압적 공포정치로 찍어 누른다.

계급적 단결을 도모하지 않고서 한발도 못 나간다

국가권력과 자본의 이성을 상실한 듯한 행태에 경악하는가? 혹시나 문재인이, 안철수가 집권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란 환상을 품고 있는가? 혹여 폭압적인 정권의 노골적인 자본독재에 대해 야당들이 아무 역할 못하는 것에 실망하는가? 혹시, 아직도 그들이 독점자본의 좌우 날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큰일이다.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도 독점자본주의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하는가? 그 누가 집권하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오직 노동자계급 스스로 각성하고 계급적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연봉제·퇴출제·노조파괴·사유화 정책에 맞서 완고한 투쟁을 조직하자. 대규모 노동자 해고 사태에 맞서 자본을 해고시키겠다는 기세로 함께 어깨 걸자. 각 업종에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이벤트식 파업투쟁은 정권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한다. 소심한 방어투쟁으로는 결코 정권과 자본의 공세를 저지할 수 없다.

지금 국가권력과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지켜내기 위해 노동자계급을 재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자.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조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당면한 과제를 중심으로 투쟁을 조직하더라도 전 민중적 분노를 하나로 모아내는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 철도노조는 2013년 23일간의 수서발 KTX 사유화 저지를 위한 파업투쟁에서 전 민중적 지지를 받았다. 현 시기 정세는 철도노조가 제대로 기세만 세우면 거대한 저항을 조직할 수 있다. 공동의 과제가 되고 있는 노조파괴와 연봉제·퇴출제의 공통분모는 삽시간에 거대한 저항을 조직할 수 있다. 모든 상업화·사유화정책에 맞서는 노조들과는 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회의 민중들은 이미 충분히 뿔이 나 있다. 부정선거, 세월호 학살, 국정원의 온갖 못된 짓,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반도 사드 배치, 모든 부문에서의 정권의 파쇼적 행태 등. 각계 약진하지 말고, 힘을 쓸 때 제대로 쓰자. 파업투쟁을 전개하면 반드시 가두에서 민중 총궐기와 결합하자. 가능한 모든 역량이 총단결하여 박근혜 정권을 포위·압박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겠다는 포부를 실천하자! 투쟁! **노동전선**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노조파괴·공안탄압 중단! 한상균 석방!
재벌책임 전면화!
구조조정 중단!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사드(THADD)배치 반대!

민중노총 노동자일-총력투쟁

2016.7.20.(수)

수도권 서울.경기.강원 14:00 여의도 산업은행 앞	대구 16:00 한일극장 맞은편
충북 16:00 상당공원	경북 11:00 포항 해도근관공원
대전 16:00 대전고용노동청	부산 15:00 부산시청
세종충남 7.15. 16:00 온양온천역	울산 14:00 태화강 둔치
전북 17:00 국민의당 전북도당	경남 15:00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
광주 17:30 5.18민주광장	제주 17:00 제주시청
전남 15:30 여수시청	

민중노총



매주 목요일
 충무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5시 30분 사회보장정보원
 충무로역 5번출구 남산스퀘어빌딩 앞
 * 사회보장정보원 집회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6시 20분 세종호텔
 명동역 10번출구 세종호텔 앞

7시 30분 티브로드
 장충동역 162-1 태광산업 본사, 세종호텔에서 행진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 세종호텔노동조합 | 사회보장정보원분회



유성기업 한광호와 함께하는

**★별빛밤이
 빛나는 밤에**

태하연, 와이낫, 스카워라이어즈, 허클베리핀과 함께하는 별빛밤 콘서트
2016년 7월 23일(토), 18시부터 /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 18시부터는 박자회가 진행됩니다

한광호를 기억하고 유성 노동자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별빛밤이 빛나는 밤에 현수막이 빛나는 밤에!
 우리동네에 현수막을 걸어와 비용을 입금하면
 7월 15일(1차)부터 우리동네에 현수막이 걸립니다(단체신청 가능)

〈현수막 신청방법〉
 1) chums317.com 에 들어간다.
 2) 현수막 설치 장소, 문구, 게시자 이름을 남긴다.
 3) 농월 302-0374-1643-11(경주화)로 2만 원을 입금한다.
 4) 현수막이 걸리면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알려고!

연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박자회
별빛밤 박자회 물품을 보내주세요.
 23일(토) 15시부터 열리는 박자회를 운영해 주세요.
 수미금은 유성기업 투쟁에 쓰입니다. 물품을 보내시는
 분들의 이름, 물품의 사연도 함께 보내주세요.

*부스는 직접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운영이 어려운 단체나 개인은 물품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보내주실 곳 : 서울시 중구 경동 경향신문사 13층 민중의 힘
 *문의 : 고동민(010-5602-6632) / 오진희(010-7763-1917)